野 평가위 가동 놓고 주류-비주류 대립각

평가위 "주중 첫 회의…12월 중순까지 평가 끝내야"
비주류 "평가위 규정 손질·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
안철수·비주류 반격…민집모는 혁신토론회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의 1차 관문인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당내 비주류는 평가위원 인선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평가 적용 방식 변경,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내세우며 주류 측과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는 지난 26일 평가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평가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주류의 반발을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평가위 관계자는 "평가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며 "주중 대면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현행 당규상 내년 4·13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평가를 끝내야 하지만 구성 자체가 늦어져 빨라도 12월 중순에야 평가 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조은 평가위원장 임명 때처럼 평가위원 인선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류 측이 이미 평가위원을 선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 대표 측은 "평가위원 인선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당헌·당규상 평가위원 인선은 최고위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평가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평가하는 사람(평가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며 "당내 정치적 절차가 대단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하위 평가자 탈락을 전체의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의원을 탈락시키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규성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도 논란의 불씨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의총 논의 자체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 측은 "평가위 규정을 바꾸려면 다시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여당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비주류는 "문 대표 체제의 혁신안은 실패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주류를 향한 반격에 나설 태세다.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오는 29일 토론회를 열어 야당의 계속된 선거 패배 원인과 바람직한 혁신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다음달 4일께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토론회에서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 당 쇄신을 다룬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천 혁신안을 집중 거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친손(손학규 전 대표) 진영 전·현직 의원들이 다음달 2일 집단 회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27일 "손학규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전·현직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라며 "전남지사 당선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며 별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선집중' 손학규 출국

카자흐 키멤대 초청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구애의 손짓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손 전 대표가 카자흐스탄 키멤(Kimet) 대학교 초청 강연을 위해 27일 출국했다.

손 전 대표의 이번 출국은 키멤 대학교 설립자인 방찬영 총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손 전 대표는 '한반도 통일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계획이다.

강진에서 칩거활동에 들어간 뒤 국내외의 모든 정치 및 특강활동을 중지했던 손 전 대표가 이번 특강을 수락한 것은 방 총장과의 평소 친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특강을 통해 안보 불안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양한 세력과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포용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또,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둘러본 뒤 오는 31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키멤 대학교는 중앙아시아 최고 명문대학으로, 카자흐스탄의 리더양성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국정화 반대" 거리로 나선 野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 교과서 반대 결의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왼쪽)와 이종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성장만이 답" vs 야 "소득 높여 내수회복"

여야 싱크탱크 세미나서 설전

여야 싱크탱크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는 한국 경제 진단에 있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해법을 놓고는 견해가 갈렸다. 여당에서는 창조경제와 4대개혁 완수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각각 내세웠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저성장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희망경제)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으로 국민 대다수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실상은 임금상승을 통한 '분배론'이며, 성장 전략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노동소득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줄여 장기적으로 사회의 총소득을 늘려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저성장시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가계소득 3대 패키지를 내놓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기대를 했었다"면서 "그런데 노동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대체하고 가계소득을 배당소득 등 고소득층의 소득으로 대체하는, 그야말로 '짝퉁' 소득증대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방정가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김효남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해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AI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AI 발생 횟수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도내 120농가에서 AI 발생으로 인해 242만6000여 마리, 예방적 살처분 215농가에서 446만7000여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으며, 이에 따라 농가에는 644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농가는 2회 이상 중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방역관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 등의 주장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하수 '관리체계 조례' 대표 발의

권 욱 전남도의원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99회 2차 본회의에서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권욱(목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사용중인 지하수 관정 24만3184개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2개 시·군은 이들 관정에서 매년 5억7900만t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무허가로 개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수 용도는 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각각 12만1084개소(1억5300만t), 12만970개소(4억1200만t)가 사용중이다. 공업용수용 934개소(1000만t), 기타 196개소(300만t) 등도 이용되고 있다.

지하수 보전구역은 지난 2002년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의 1개소 0.32㎢가 지정돼 있다.

권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남도와 시·군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할 때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불법매립 조사 촉구

정진아·김선미 광산구의원

광주시 광산구의회 정진아·김선미 구의원은 27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불법매립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맹독성 물질인 잔류수은 존재여부조차 모른 채 작업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은이 땅속에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라며 "공장 주변엔 저수지와 아파트 주택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토양과 수질 오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남영전구는 지난해까지 수은을 사용했던 사업장이었지만 그간 한 번도 수은과 관련해 지정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수은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선 관계기관과 민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노동청은 철거작업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고철 운반분리작업 노동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랄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